



<제41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 한미동맹-정전협정 60주년을 보내며 ▣

일시: 2013년 10월 29일(화) 18:30~20:30 / 장소: 프레시안

- ▶ 사회: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 ▶ 토론: 강태호(한겨레 기자)  
 김준형(한동대 교수)  
 박인규(프레시안 협동조합 이사장)  
 최종건(연세대 교수)

● 주최: 코리아연구원, 프레시안



※코리아연구원(이사장: 이재정 / 원장: 김연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김창수(코리아연구원) : 올해는 정전 60년, 한미동맹 60년이 되는 해다. 사실 정전 60년과 한미동맹 60년이 같은 해라는 것은 함께 존재하기 힘든 일종의 형용 모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 60년 한미동맹 60년을 보내는 소감이랄까?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할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김준형(한동대) :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한미동맹과 관련된 행사는 꽤 많이 한 것 같다. 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전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마틴 Dempsey 미 합참의장도 방한했다. 그런데 정전체제와 관련해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 동맹 60주년 관련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전체제 이야기는 평화체제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 정부보다는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다.

아무래도 정전체제를 기념할수록 이것이 잘못됐다는 점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동맹보다는 덜 기념되는 것 같다. 보통 '몇 주년 기념' 이라고 하면 특정한 일이 완료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전체제가 60년이 됐다는 것은 전쟁을 멈춘 현 상태가 60년이나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완전히 멈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속되는 묘한 부조리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최종건(연세대) :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전후로 한미 동맹 관련 여러 세미나 및 행사들이 있었는데 비판적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일단 동맹의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온 것 같다. 6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동맹이 상당히 신화화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 정전체제 극복을 위해 평화, 교류, 상호 이해, 상호 인내보다는 대북 억지가 너무 강조되면서 동맹이 신화화되고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 남북관계가 안 좋거나 북핵문제가 생기면, 동북아의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동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지적 의존성이 강화된 것 같다.

물론 동맹 60주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다. 하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이를 재점검해봐야 한다. 동맹이 우리에게 이익을 줬다면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안보 국면에서 북한 문제는 일종의 상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와 MD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일 동맹의 결과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해주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점도 나온다. 이러한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가 동맹의 비용과 한계는 생각하지 않고 신화화만 한다는 것이 문제다. 동맹이 신화화되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강태호(한겨레) : 정전 60년과 한미동맹 60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형용모순으로 볼 수도 있다. 정전이 아직도 전쟁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전 60주년이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동맹을 강화하는 필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전과 동맹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호의존적으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올봄에 북한이 정전협정마저 무효화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됐는데 이로 인해 동맹을 보는 시각도 군사적인 관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정전협정이 아직도 유지되느냐는 관점보다 오히려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닌가 싶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건군 65주년이 더 부각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한미동맹의 적이라고 불리는 북한이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시점과도 일치됐다. 한반도 내부에서 한미동맹과 북한 위협 간 적대적 상호 의존성이 결과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했다고 본다.

또 하나의 측면으로 미·중 간 패권을 다투는 과정 속에 힘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짚어볼 수 있다. 아시아로의 이동(Pivot to Asia)을 내걸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서 한미 동맹을 생각할 수 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다는 미국 입장이 나왔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쪽으로 이 기제가 작동됐다. 냉전 시대 미-소 양 진영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미 동맹이 냉전이 끝났음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고 본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이동이 동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존재 이유를 부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김준형 : 정전체제가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정전체제에는 또 다른 함의가 있다. 정부가 정전체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동맹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체제에 대해 한쪽 측면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정전체제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정전체제가 동맹을 강화하기만 한다면 정전체제를 많이 선전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60년 동안 이어지면서 '중독'이 된 것 같다. 한미동맹이 신화, 관성,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는 것 같다. 가만히 보면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정치 갈등이 좌우의 이념 대립이 아니라 권력을 잡는 데 얼마만큼 유리한지를 따지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한미동맹이 부각되는 이유도 한국에서 동맹이 보수를 결집시키고 정권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안보 담론이 평화 담론을 완전히 지배하는 안보 포퓰리즘이 동맹 강조와 연결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북한의 도발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없더라도 안보 담론이 한국을 크게 지배한 것 같다.

박인규(프레이안) : 일단 사람들이 정전 60주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곧 비정상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싶다. 정전, 그리고 이에 따른 남북 간의 대결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느낌,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 등이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6.25는 동북아 냉전의 시작이다. 남북 간의 군사대결이 미·중 간의 군사대결로 확대되면서 동북아 냉전이 굳어진 것 아닌가. 더 나아가 6.25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군사화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1950년 4월 마련된 미 국가안보문서 NSC-68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 국방력의 대대적인 확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6.25가 터지고 소련의 세계 적화 음모가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국방예산이 4배나 늘어났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군사주의로 나아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은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남북 대결은 동북아 냉전을 고착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못 풀고 있다. 6.25를 계기로 적대 상태에 들어간 미국과 중국은 1971년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화해에 성공에 성공했는데, 남북 간의 대결상태는 국제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남북 대결 상태가 미·중 간 새로운 군사대결의 빌미가 되고 있다. 물론 남북대치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 대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대결에 또다시 끌려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의 장래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또는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의 합의가 없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전이라는 사태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중북 장사'다. 작년 대선 승리를 비롯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든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 국내 정치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박근혜 정부는 NLL 포기 논란 등 북한을 끄집어내서 국내정치에 얼마나 많이 활용했나.

남북관계 정상화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담론 수준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정치 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보수세력이 북한을 끌어들이어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북 장사를 하고 이것이 먹혀들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이 정전 60주년을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여기에는 북핵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전체제, 남북 대치상황 등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

### 정전체제 극복, 가능한 것인가

김창수 : 정전체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나? 정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박인규 : 현재 동북아에서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촉매제는 결국 남북화해다. 남북대립과 북핵문제가 이어지면 미·중 간 군사대립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정치권 인사들도 하고 있는지 여부다. 중북 장사가 되다 보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사실 국내정치와 관련해 민주주의라든가 경제, 복지 문제 등 다른 부문에서 보수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다 보니 국민들의 반복 정서에 기대는 것이다. 중북몰이를 통해 국내의 반대세력을 제압하려 하고, 결국 보수정권의 안위를 위해 남북대결이 계속 고착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미·중 간 군사적 대립도 격화될 것이다.

동북아 냉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냉전 해소의 시작은 남북 간 화해인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나 국내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동북아 냉전 해소에 대한 깊이 있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

최종건 : 분명히 정전은 상황적 현실이다. 그런데 정전이 아니라 동맹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한다. 동맹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정전협정을 이야기하면 소위 "잔치판에 왜 정전협정을 이야기하느냐, 김 새게"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정전이라는 단어는 동맹이라는 단어만큼 이념화되어 있다. 정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북한이랑 화해하자는 거지? 북한이랑 뭐 해보자는 거지?" 라고 본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문제가 발언하는 사람의 사상을 점검하는 이른바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버린 것 같다.

재밌는 현상은 동맹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발전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이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인지, 아니면 대북 억지라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발전인지, 그것도 아니면 동북아 안정의 일종의 런치핀(핵심축)인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수사(레토릭)는 많지만 정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전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강태호 : 정전협정이 냉전의 재생산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의탁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지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 정전협정이 사문화 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동맹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확대 재생산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냉전적 대결 구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체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전협정과 동맹 속에 포함되어 있던 적대관계 부분들이 무너지니까 남북대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측면도 있다. 노태우 정부 때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동맹 개편이라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적대관계의 해소라는 큰 구조 속에서 동맹과 정전협정 문제들이 다시 거론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왔을 때는 적대관계가 심화되고 대립적인 측면이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 60주년을 맞았다는 시기적, 상황적 요인들이 지금 우리가 동맹이나 정전협정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무엇이든 오래 지속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내적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배층이 동맹과 정전협정 속에서 자기 존재근거를 갖고 현실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동맹에 대한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자기 재생산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고 끊임없이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

정전협정이라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동맹으로서만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면 현실 정치와는 불일치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역할 규정들이 계속 부여되면서 동맹이 대체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내적 근거들을 확보하지 못해왔다. 한미 동맹이 미래비전, 전략동맹으로 변화했고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닌 포괄적인 동맹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동맹의 새로운 동기와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지속되는 것은 그 지속성에 의해 그것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내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체제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밝히고, 최근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북한을 포함한 대륙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이라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동맹이 갖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 일단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가 문제가 된다. 현 정부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북한과 대화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모순점이 없다고 말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의 성격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과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만들었던 집단들이 실제로 당시 공약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 현재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군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며 때로는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로 동맹을 설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져왔던 방향성과 현재 외교안보팀 구성을 보면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 한미 동맹, 실적으로만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가 더 좋았다

김창수 : 한미동맹에 대해 평가해본다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한미동맹 재조정과정에 대한 평가 또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한미동맹 현주소는 어떠한가?

김준형 : 동맹이라는 것은 국가 전략 중 상호 간의 이익의 접점을 찾아 하나의 수단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우리한테는 한미동맹이 신화가 되어 있다. 전쟁억지, 대북억지 등 동맹을 묶어줬던 공통의 위협인식이 흔들렸을 때는 동맹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실질적으로 탈냉전이 왔을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동맹이 흔들린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다. 그걸 재조정을 통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을 우방국으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군사주의는 축소되어야 한다. 동맹 초기에는 미국도 여기에 동의했고 한국도 남북관계 개선되면서 군사주의 축소를 통한 재조정에 상당히 동의했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이 냉전 이후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있어 생각보다 평화롭지 않았다. 맘대로 잘 안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반세기 이상의 쌓아온 동맹 자산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은 기존의 동맹을 다 부활시켰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한국의 진보정권이 한미 동맹을 망쳤다는 식으로 덮어씌워졌다.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약해진 것, 그리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형님-동생의 관계로 맺어진 한미 간 보장 조약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두 가지 주제가 한미 동맹을 위기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진보정권 다음에 등장한 한미 간 전략 동맹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동맹은 다시 냉전적이어야 하고, 군사적이어야 하고, 친미적이어야 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전략 동맹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말려들어 간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호성이다. 이는 우리의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상호성이다. 우리는 걸로 격이 좀 높아지는 대신, 상당 부분 미국의 전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동맹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심지어 야당이나 진보들도 한미동맹은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하고 간다. 문제는 한미동맹은 지지해야 되고 깊어져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혀 없다는 점이다.

최종건 : 동맹을 평가할 때 동맹의 '업적'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도 했고 한미 FTA도 추진했다. 군사적, 경제적 조치에서 미국과 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까지 마련했었다.

서울이나 워싱턴에는 동맹이라는 화두를 놓고 장사를 하는 이른바 '동맹 장사꾼'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의 보수적인 학자와 관료들은 한국이 한미동맹의 하부조직이어야 하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순응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미국 입장에서 늘 말을 잘 듣던 친구들이 협상을 하려고 하니깐 일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두고 "후졌다, 퇴색되는 것 같다" 라는 레토릭을 형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오히려 동맹에 대해 폄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다루기는 힘들었지만 실적은 나왔다. 또 이들 정권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공헌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들보다 순응적이었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 할 실적은 없다. 단지 한미 동맹이 좋았다는 레토릭만 나왔을 뿐이다.

여기서 동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문제가 나온다. 업적을 놓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양쪽 수도에 있는 주요 학자들과 관료들의 말로 평가할 것인지. 양국에서 오가는 '말'로 동맹이 좋았다, 나빴다 혹은 복원됐다 라는 평가를 한다면 이는 우리가 동맹의 실체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들보다 더 안 좋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시작전권을 빨리 한국에 주고 싶었는데 한국은 안 가져간다면서 미국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다. 국내 경기도 좋지 않았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한국의 의존이 상당히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동맹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레토릭만 강화된 이명박 정부 시즌2가 되거나 여전히 평가할 덩어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 하지만 전작권 문제가 MD 문제 등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와 한 기차를 탄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도 손을 들어준 것이고.

김준형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방미 직전까지 미국에 대해 날카롭다가 미국에 다녀온 이후에 순응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는 레토릭이 워낙 좋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레토릭도 좋게 만들고 실적도 잘 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오바마 2기 정부는 초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 상당히 의심했다. 중국 이야기하고 신뢰 이야기하니까.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신뢰외교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계속 설득했었다.

김창수 : 동맹을 실적과 레토릭으로 구분을 했을 때 실적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레토릭은 포장인데, 본질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포장에 의해 평가된다는 측면이 많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안보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변형돼서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 같다.

박인규 : 한미 관계를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한국은 미국의 피후견국(client state)이었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군사원조로 유지돼 온 것 아닌가. 물론 이제는 한국의 국력도 신장돼 보다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려 하지만, 현재의 상태가 제대로 된 동맹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신화화의 요건인 것 같다. 얼마 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군사력보다 정보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미국은 북핵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응을 미국의 국익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다. 이번에 스노든 사태를 봐도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도정당하지 않았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정보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정보공유 협정을 맺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앵글로색슨계 국가들만이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미군이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분명히 해왔고 미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1970년대 미·중 화해 당시 키신저가 중국 지도부에게 주일 미군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미군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행동을 모두 억제하는 이중의 봉쇄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 지난 1991년 김용순 당시 북한 외상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한반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의미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9.11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층 더 군사화되면서 한미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남북화해라는 데 있어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해치면서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라고 본다. '중북'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중독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미동맹보다는 한미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냉정한 판단인 것 같다.

강태호 : 우리 내부에서 "동맹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단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랬던 적은 있다. 70년대 베트남전 패배 과정에서 닉슨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면서 동맹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갖고 동맹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 미국의 국방비 부담이라는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도 나왔었고.

동맹 재편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의 입장을 갖고 나갔던 것은 전작권 문제가 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제기됐었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의 2012년 전작권 환수 결정으로 이어졌다. 동맹 재편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낸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동맹 재편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와 국제적 탈냉전의 흐름을 반영한 재편 과정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본다.

이 과정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방향이 있었다. 대등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냉전형 동맹과 다른 동맹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동북아에서 양자적인 군사동맹 차원이 아닌 다자적인 안보질서로서의 보완이라는 측면으로 발현됐고, 이것이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 합의 속에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맹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동의라는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동맹의 역할이 확대되고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한 부분이 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중시했는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중국 견제를 비롯해 신속 배치군으로서 중동의 전쟁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맹의 상호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곳에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라크 파병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등한 동맹, 자주적인 동맹의 성격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갈등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충돌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기존에 자신들이 일방주의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했던 것을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접근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비롯해 한미 동맹을 대등하게 만들어가자는 것이 미국을 자극했다고 보고 우리 입장을 후퇴시킨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합의했던 동맹의 미래비전 속에 담겨있다고 본다.

현실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6월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확장역지'라는 개념이 있다. 지금 우리가 김제인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은 당시 합의됐던 확장역지 개념,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온 것이다.

동맹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 동맹의 성격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마치 한국의 위상이 강화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동맹의 변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긍정적인 면들이 국민들 머릿속에는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고,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부여했던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냉전 동맹이 아닌 미국에 의해 변화된 동맹이 내부적으로 계속 동의를 얻어나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 전작권 환수 없이 안보 강화?

김창수 : 한미동맹의 현안으로 전작권 문제를 비롯하여 MD, 한미원자력협정 등 다양한 사안들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되었고 한국의 MD 불참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현안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최종건 : 전작권, 무기 수입, MD 등은 다 돈과 연결된 것이다. 우선 전작권을 계속 이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두 가지다. 북한이 위협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북한을 방어할 능력이 안됐다는 것. 근데 이게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북핵문제는 계속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든 진화되고 있었다. 그때도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상수였다는 것이다. 시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북핵 문제는 여전했다.

처음 전작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의 안보 능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었던 때였다. 그런데도 2012년 전작권



환수를 결정했었다. 지금 전작권 환수를 다시 2015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결국 동맹의 그늘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더 오래 안주하려는 것이다. 시원하고 아늑하거든. (웃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만 하려는 생각이다. 2012년도에 받기로 한 전작권을 2015년으로 연기했고 그러면서 북핵의 건설적인 해결도 못한 상황에서 올해 초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비대칭 위험이 크다는 담론이 팽배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동맹에 당연히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전작권 환수 연기가 또 한 번 일어난 것이다.

전작권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논리는 전작권 때문에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것이다. 미국을 붙잡아두려면 전작권을 미국에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 군사 역지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해 말은 험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북 억지 태세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도발에 대해 원점타격을 한다, 선제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전작권이 없는 현 체제에서 한국 대통령은 연합사에서 협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김준형 : 전작권 환수 연기는 미국에 의존하려는 경향과 국내 정치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보수에 여러 파가 있다. 그걸 묶을 수 있는 것이 전작권 연기다. 이 사람들을 전부 묶을 수 있는 것이 동맹이고 중복 장사인데 마침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이 미국의 전략을 잘못 읽었다는 점이다. 전작권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안보 부문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싶어 한다. 현대 전쟁이 점점 무기체계가 복잡해지고 정보전이 되면서 미국이 구태여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한국과 일본의 군대는 미국식 편제가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령관 자리를 주고 자기들이 부사령관의 역할을 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전략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한국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실제로는 미국식 전략을 운용하게 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만 하면 우리가 미국에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 대가로 많은 것을 미국에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간과하려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수의 결집을 통한 내부적 권력 유지, 즉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밖에 없다.

강태호 : 한미 군사와 관련된 현안들이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다. 즉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것이니까 좀 불리한 입장이다. 원자력 협정은 미국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이해관계 측면과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 무장화 가능성 때문에 소극적이다. 이걸 놓고 서로 주고받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주고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작권은 우리가 던져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 문제는 한국의 주권적 권리로서 한국이 자신들에게 요구하고 받아내야 할 할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것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 주한 미 2사단이 전방에 배치돼 인계철선의 개념을 가졌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전작권을 인계철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대를 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광범위하게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의 인식은 지역과 전략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에 서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항복을 얻어낼까에 집중돼 있다. 이는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미국의 군사자원을 총동원한다면 북한을 전쟁을 통해 제압할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군사적 관점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작전도 수행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전략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가 아닌가 싶다.

역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해체는 바로 적화통일이고 좌파의 논리라는 국민적 정서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결국 전작권 문제는 미국이 "너희(한국)에게 전작권 줄 테니 다른 것들을 양보하라"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본다.

박인규 : 1991년 리영희 선생이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05년쯤 백낙청 선생이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이후 자기 힘으로 나라를 방어해본 적이 있나? 실제로 정치·군사 지도자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힘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이 들고, 실제로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든다.

강태호 :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쟁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건 : 사실 우리 스스로 전작권을 갖고 유일하게 싸웠던 것이 베트남전이기도 하다.

박인규 : 그런데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경제 규모로 북한의 40배나 되는 국력을 갖고 있으면서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안보라는 것이 군사력의 우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김대중 정부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 패트리엇미사일 도입을 권유하자,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이 '남북이 화해하면 굳이 그런 무기 체계가 필요하겠느냐'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 이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 궁금하다.

현 정부에 군인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큰 판에서 봤을 때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관건이 남북한의 화해다. 남북이 화해하지 않는 한·미·중 간 군사대립도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북한의 핵 포기과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것이다. 이런 큰 그림 없이 군사력만 증강하면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반복정서가 대단히 강하다는 점이다. 대중 느낌으로 국민의 70% 정도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반복 정서가 더 강화된 것 같다. 상황이 이러니 보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적 문제를 '중북'이라는 카드로 해결하려 든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면 정말 잘 먹혀들었다. 이런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박 대통령이야말로 남북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이 남북화해한다고 하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누가 막겠나. 아버지가 이룬 산업화라는 성과를 능가하는 남북화해라는, 그야말로 민족사에 남을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영 아닌 것 같다. 박근혜 주위에 조금 더 전략적인 틀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의 정권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다.

최종건 : 전작권 문제는 동맹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다. 양측이 독립적인 전작권을 갖고 있느냐, 통합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씩 분할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연합사 차원에서 우리는 평시작전권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협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이라는 카드를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의 멘탈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다.

안보가 중요하다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논리적 모순이 나타난다. 이들은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 핵도 필요하다,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때려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전작권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나. 군사작전의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 완전히 모순인 것이다. 몸은 건장한 청년인데 멘탈은 "우리는 아직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문제를 국내 정치에 투영해보면 정말 안보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지, 북한을 독자적으로 억제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자라고 본다.

김창수 : 안보와 평화, 동맹 발전과 남북화해. 언뜻 보면 서로 대치되는 것같이 보이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나가야 하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동맹의 그들은 시원하고 아늑하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박 정부가 갖고 있는 장점조차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김준형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이명박 정부가 망쳐놓은 대북정책 사이에서 장점을 뽑은 것으로, 어젠다는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 그런데 어젠다만큼의 비전과 플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안보프레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보수세력이 남북화해를 이끌어낸다면 국익 차원에서 이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약과 실제 정책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공약은 당선을 위한 대선 어젠다로 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강태호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여러 공약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외교안보영역도 마찬가지다. 당선 후에 구성된 외교안보라인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군 출신의 안보실장, 국정원장과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자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당시 박 후보 진영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부터 군 출신 인사들의 의견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했던 2015년 환수를 박근혜 후보 공약 속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후보가 그것을 거부하고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정부의 입장은 당시에 비해 후퇴한 것이지, 기만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후퇴 과정에서 군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이라고 본다. 일련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했지만 그걸 통해 국면을 바꿔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보여줬던 안보의 무능력은 진보진영이 공격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따라서 보수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곳에서는 안보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변화 및 후퇴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한미 동맹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미국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군비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MD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나?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 존재할 때 필요한 것이다.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강화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의 군비 확장은 이것들과 일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은 사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다. 지금 킬체인과 같은 무기체계가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나? 킬체인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북의 실제 핵무기 능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군에는 군산복합체적인 논리가 들어있다고 본다. 미국 무기를 구입하고 미국에 필요한 시스템적인 요구들을 높여가면, 담당자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무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담보하고 가는 것 아닌가.

김준형 : 당선 전과 후에 박 정부가 공약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적 사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대석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잘려나갈 정도로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이다. 일례로 이번에 국방예산이 줄었다. 무기를 사와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비가 마련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빨리 군비를 강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보면 전체적인 시각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

최종건 : 동맹과 관련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군산복합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군부와 보수정 치인까지. 무기에 대한 것도 무기업자, 로비스트, 정치인이라는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생산해 낸 안보 논리 혹은 위협 논리가 주류논리가 돼서 MD는 왜 필요한지 킬체인은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위협은 장사정포인데.

연평도 포격이 터졌을 때 공군이 F-15K 전투기를 띄웠는데 거기에 SLAM-ER 미사일을 달고 나갔어야 했다. 근데 못 달았다고 한다. 장착하는 데만 40분이 걸렸기 때문이란단다. 결국 공대공미사일만 달고 비행기를 띄웠다. 북한은 우리한테 한 발에 20만 원짜리 포를 때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SLAM-ER이라는 20억 짜리 미사일로 대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대응도 못한 것이고.

강태호 : 무기개발 논리로 고사양의 무기체계가 동원되지만 실제 북한과 싸울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처럼 기술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아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협논리가 확산되는 것이다. 기존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 비용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무기도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만 책정되어 있는 이러한 취약한 체계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군인들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최종건 : 결국 군사적 동맹이 존재하는 근거에는 위협이 존재한다. 위협은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다가오고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몇 가지 이벤트만 보고 과대 포장하여 상당히 큰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실제 위협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카르텔에 의해 재생산되는 위협논리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김준형 : 근데 그 카르텔이 컨트롤타워가 있고 조직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심리적인 것도 작동하면서 생각이 모여지는 것 같다. 뭔가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 한반도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는

김창수 : 정전체제를 전환시키는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미국 정가는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강태호 :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과연 워싱턴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된 워싱턴 발 뉴스도 없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중·일 간 군사적 긴장 차원에서 일본을 어떻게 동원하고 미·일 동맹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집중돼있다. 그런 것 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워싱턴이 취한 정책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것이었다. 나머지 부분은 중국이 알아서 하면 따라가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이 결여된 상태다.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 역시 중국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준형 : 일단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국내 여론 문제가 있다. 미국 국내에서 대북 여론은 거의 알카에다를 바라보는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나쁘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설블리 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오바마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 오바마는 외교 문제에 있어 해결 가능해 보이는 것들만 건드리고 임기를 끝낼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이니셔티브를 쥐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본다. 대중 견제의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짝짜꿍이 되지 않나. 여기에 북한이 미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창수 :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자신들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김준형 : 그래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강태호 : 4차 핵실험을 할지 여부는 기존의 핵실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 과거 북미 관계나 핵문제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북한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서 핵실험을 검토한 것은 맞다. 그런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추가제재가 나온 이후 강도 높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다가 5월 들어서서 중국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중국이 핵실험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레드라인을 그어 놓은 셈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겠나? 과거와 다른 여건이 존재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막고 나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확실한 보장 방안이 있다고 미국에 제시하고, 이번에 우다웨이(武大偉)가 미국에까지 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갔을 때 그 핵실험이 한미일을 자극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력 강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노력하는 상황에서 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라는 명분이 설 수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 무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우라늄 농축도 있고, 경수로 재가동도 있다. 일단 북한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밟을 것으로 본다. 핵실험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

김준형 :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초기에 굉장히 단호했고 금수조치까지 이야기했다. 중국의 의사를 미국에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또 중국은 현재 미국에 가서 북한과 거의 동일하게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중 관계는 지금 좋아진 편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북한도 중국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군사적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다.

강태호 : 미국이 일본 쪽 입장에 서서 미·중 갈등관계가 생긴다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내년을 내다보면 6자회담 국면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미·중 협력구도는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 외교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움직일 것이다.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6자회담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가 2.29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불리 예상하기 힘들다.

또 한미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선행적 조치는 북한에 의해 거부됐다. 북한은 대화 과정에서 핵 동결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권리 등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을 북한이 수용한 이상 모든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 논의 과정 속에서 한미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즉 6자회담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중국에 요구했던 것이다. 중국은 그러한 프로세스에 필요했던 것을 미·중이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김창수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명분을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에 "우리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일종의 명분을 축적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겹쳐지면 북한이 자신들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도발을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일정한 사전 합의가 되면 내년 봄에는 6자회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강태호 : 과거에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제네바 합의에서 중국은 존재 자체가 없었고 역할을 설정하지도 않았었다. 2002년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부시가 장쩌민(江澤民)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의 발언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6자회담 들어서서도 중국은 회담을 열어주는 입장에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중국을 의식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일례로 북한이 최근 보여준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보면 그렇다. 최근 제주도 근방 해역에서 한미 군사연습이 진행된 바 있다. 그걸 북한이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을 했다. 근데 이 훈련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를 비난한 것은 중국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핵 문제를 갖고 도발한다면 중국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미 군사연습이 대북 위협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상쇄하는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상의 분위기도 있고, 북한이 만들었던 올 상반기 한반도 위기상황이 결과적으로는 한미 군사 동맹, 한국의 군사력,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북한 나름의 평가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군 명군 식으로 올해 상반기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강화가 이어졌

다. 내년에는 유화적인 협상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단지 일본과 중국 간 군사적 갈등 요인들이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인규 : 김 교수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미국이 북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인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미국 국내에 북한 편을 들어줄 만한 유력 정치인도 없고 우호적인 여론도 없다. 예를 들어 클린턴행정부 당시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때 매케인 상원의원 같은 보수정치인도 수교해야 한다며 관계 회복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북베트남에서 6년동안이나 포로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힘을 실어주니 미.베트남 관계정상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란만 해도 이슬람혁명 이전 20여 년 동안 미국과 교류해온 경험이 있다. 오바마가 외교분야에서 업적을 남기려 한다면 북한보다는 이란 쪽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최종건 : 미국이 플러스 알파를 던져 놓고 중국 보고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 보니 중국에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한 것 같다. 6자회담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도 그만인 것이고. 미국은 북핵문제,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수동적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해봤자 뭐해" 같은 생각인 것 같다.

6자회담, 특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워싱턴에는 큰 로드맵이 없다고 본다. 이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걸 미국 용어로 '전략적 인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 이후에 아시아로의 이동 정책, 재균형 정책이 나왔다. 문제는 여기에 타깃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데 있다.

미국과 일본의 2+2 회담(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8개 조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는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조항이 나왔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격상시켜준 것이다. 나머지 조항은 일본이 부담해야 할 무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김창수 : 결국 워싱턴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올지 여부인 것 같다.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종건 : 이쯤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이겠지만, 아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확산일 수도 있다.

김준형 : 상당 부분 비확산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오바마는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 하고 있다. 온건책은 중국에, 강경책은 한국에 맡긴 것이다. 이게 지속돼오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미국과 MD를 거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상당 부분 한국은 MD와 일체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더 사주면 좋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의도에 맞게 스스로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최종건 :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강태호 :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더 확산되는 측면도 있다.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중국이 북한에 다가가는 것을 봤을 때, 특히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해서 다가가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될까? 이제 중국과 협상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예전에 북·중 국경은 대단히 통로가 좁았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친선의 다리도 만들었고 신(新)두만강대교를 건설한다고 하고 신(新)압록강대교는 내년 6월에 개통된다고 한다. 북·중 간 거리도 가까운데다가 실질적으로 오고 가

는 일들이 벌어지면 북한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질서가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 반면에 미국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북한이 멀어지는, 혹은 개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박인규 :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간 대립이 좀 풀리는 듯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동북아 냉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남한이 나서서 북한과 관계 개선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 초기,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요한 독립변수는 한국인데 지금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동맹의 그늘에만 있으면 남북관계가 풀리겠나.

김준형 : 당분간은 이런 시간이 계속될 것 같다. 대내외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민족의 장래에는 해가 되지만 정권에는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남북관계 개선의 이니셔티브가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 좀 답답한 상황이다.

김창수 : 정전 60주년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서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현주소, 최근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까지 짚 살펴봤다. 안보나 동맹이 본질이나 실질보다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국내 정치적인 여파라든가 이익에 관계되는 것들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다. 현재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균형적 조율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10/29)